

유럽의 양극화, 코빈과 멜랑송의 부상

유럽에서 좌파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은 좌파가 아니다.
중도계 자유주의자일 뿐이다



영국 총선
제러미 코빈
노동당의 약진

4~5면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좌파도 약진하다

5면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격화
중동의 전쟁 위험은
커지는가?

6면

문재인 정부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게 못 된다

3면

포장지만 바꾼
문재인 식
의료 민영화

8면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는 셈인가?

7면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면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박설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사상 최초로 강제 리콜을 명령 받아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차량 결함 의혹에 강하게 반발해 온 현대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부 고발이 접수된 결함은 이번에 인정된 5건 외에도 20여 건이 더 있다. 국제적으로도 현대·기아차의 품질 논란이 계속돼, 지난달 북미와 한국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한 1백47만 대를 리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어떻게든 강제 리콜을 피하려고 “위험이 과장됐다”며 사태를 은폐·축소하고, 내부 고발자를 해고·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지금도 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필사적이다. 차량 결함을 내부 고발한 김모 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복직됐다가 최근 한 달여 만에 퇴사하고 행정소송을 포기했는데, 이것도 심증팔구 리콜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사측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인 듯하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몇 해 전에 자신의 경쟁자들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치른 홍역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도요타는 2009년 말 가속페달 결함이 발각돼 이듬해까지 세계적으로 1천6백만 대에 이르는 사상 최대 리콜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도요타의 “신화”를 산산조각 냈다.

폭스바겐은 2015년에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들로나 총 1천1백만 대를 리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에 세계 판매량 1위 자리는 지켰지만, 앞으로 값이 나가야 할 벌금과 배상금만 22조 원이 넘는다.

현대차가 리콜 사태에 발을 동동 구르는 또 다른 이유로는,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수익성 악화 문제가 있다. 특히 울 들어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물론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막대한 사내유보금도 있기는 하지만, 자본가들에게는 충분한 현금 유입도 중요하다.)

이윤 체제의 동역학

차량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 기업의 탐욕만이 문제인 것도 아니다.

이미 올해 한국에서만 무려 82만여 대가 리콜돼,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미국·중국·일본·한국의 리콜 대수가 그해 4개국 자동차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기업주들은 잇따른 리콜 사태 속에서 ‘품질 경영’을 부르짖기도 한다. 그러나 이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 때문에 이것은 실제 구현되지 못한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차 출시 주기가 짧아졌고, 이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더 싼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빨리 개발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압력이 차량 결함 문제를 키우고 있다

켜졌다. 점유율을 높이려고 피 튀기는 각축전을 벌이는 정글에서 안전·품질·환경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흥기차’들을 시장에 내놓는 까닭이다.

예컨대,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2000년대부터 “다른 수건도 쥐어뜯다”는 슬로건 하에서 대대적인 경비 절감에 나섰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구조적 차량 결함에 눈 감기, 저질 부품 사용하기, 정규직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기, 노동강도를 끌어올리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기 등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매수하는데 공을 들였다.

바로 이런 이윤 논리 때문에, 자본가들은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

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도요타는 2010년에 사상 최대 리콜을 하고도, 2011년, 2014년에 또다시 수백만 대를 리콜했다.

현대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리콜 요구에 직면했는데, 그때마다 최소한의 차량 수리·교체로 생색만 내며 빠져나왔다.

책임 떠넘기기

특히 리콜 사태로 인한 자본가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곤 했다. 엄청난 리콜 비용을 내야 하는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폭스바겐 사측은 이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모든 예정된 투자를 재검토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총 3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는데, 독일에서는 전체 노동자 12만 명 중 무려 20퍼센트(2만 3천 명)가 대상이다.

현대차 사측의 대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에게 “품질 경영”, “생산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촉구하며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올해 임금 협상도 “실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즉, 성과가 나쁘니 임금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 결함은 생산 과정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발생했고, 사측은 이를 알면서도 꼭꼭 숨기다 사태를 키웠다. 몇 년간의 수익성 하락이나 중국 등에서 판매 부진도 결코 노동자 탓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끝없는 생산량 늘리기 경쟁과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이 위기를 낳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결코 없다.

노동운동 내 일각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예컨대, 2010년에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도요타 리콜 사태를 두고 “품질 좋은 명차 생산이 곧 고용 안정”이라며 노조도 고품질을 위한 숙련도 향상,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위기의 책임을 흐리고 사측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게 만든다. 폭스바겐 노조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기업 경쟁력 논리에 사로잡혀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해 온 것은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결과만 낳았다.

폭스바겐이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서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억제되고, 이중임금제 도입으로 신입사원은 임금이 더 낮고,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다. 이런 후퇴를 거듭하면서 기층의 투쟁력이 약화돼 온 결과, 이번 3만 명 감원 계획도 변변찮은 저항 없이 “노사 합의”로 통과되고 말았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런 폭스바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성과 부진에 따른 책임 전가, 임금·노동조건 후퇴 압박에 맞서 단호하게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사진: 이윤정

새로 나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20호 2017년 5~6월 9,000원

[특집] 페미니즘과 성 해방

[쟁점]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특집2] 1987년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30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김문성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 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요즘은 국방백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말이다.

송영무는 NLL(북방한계선) 사수를 강조하면서, 1999년 이른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전투전단장으로 북한에 대승을 거둔 지휘관이었음을 자랑으로 내세운다. 그리고 심지어 아예 한국군이 사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물론 문재인 인사에는 개혁 성향 인물들도 약간 섞여 있다.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나 노동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그렇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첫 직선 진보교육감이 된 후 무상급식 등을 실시했다.

그렇다고 해도 다 진짜로 개혁적인 것은 아니다. 안경환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 후보로, 문재인이 민정수석 조국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맡기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안경환은 국가인권위원장 시절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촛불 시위 과격 진압에 능장 대응해 진보진영과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6월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 노동자들과 반동적 왕당파 사이에서 끼여 좌우로 얻어터졌음을 그린 《만화 트로츠키》(오월)의 한 장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민중 운동과 자본가·친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압착될 상황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말 촛불 집회에서는 인권위 직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10월에 가서야 인권위의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명박의 인권위 약화 시도가 취임 전부터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안경환이 정권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창국)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지지하며 파병하려 할 때 전쟁 반대 의견을 공식 채택·발표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인권위를 비난했음

은 물론이다. 한때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국가의 원손”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과거를 감안할 때, 안경환의 당시 행동은 전혀 ‘인권스럽지’ 못하다.

안경환은 또한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가 유신 이후 보인 행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전에는 그가 시대적으로 말아서 한 소임이 있었다… 박근혜로 인해 박정희라는 개인이 상징하는 그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

명한 김은경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 환경운동 경력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눈에 띈다. 그가 2010년 설립해 대표를 맡아 온 지속가능성센터 ‘지우’의 주요 활동은 진보적 환경운동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속가능 발전과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 답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답론처럼 실질적인 사회 변화보다는 정부와 기업 등 기성 체제에

진보적 외피를 씌우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스타벅스가 일부 원료를 공정 무역으로 구입해 공정무역 기업 소리를 듣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조대엽은 우파로부터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받고 있지만, 이 행위는 매우 사소한 실수여서 문제삼을 게 전혀 못 된다. 더구나 그는 실제로 고려대 출교생들의 항의 투쟁을 지방방문하고 귀가 길에 그 사소한 실수를 범했다.

조대엽이 박근혜의 성과연봉제에는 반대했지만, 그를 친노동 개혁가라고 부를 수는 없다. “탈계급 민주주의”를 주장해 왔고, “노동계급”의 시대에서 ‘노동하는 시민’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대]”는 그의 주장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원장인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대표 과정인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과 노사관계전문가 과정은 노조 상임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노동부 관료들과 기업의 노무관리 임직원들이 수강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조대엽의 임무는 문재인이 지난 10일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될 듯하다. 문재인은 그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그 해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조대엽은 문재인 의 일자리 공약 구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구상에 참조했다고 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총액도 줄인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조대엽 후보자 지명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듯한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

문재인 인사 변호론 비판

우파만 의식하지 말고 노동자와 피차별자의 이익도 의식하라

진보진영의 가장 온건파들은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문재인 내각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의 인사를 변호하고 있다.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김상조 임명을 위해 서명한 것이 대표 사례일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조대엽에게 기대감을 공식 표명했다. 여성운동 대부분은 반기문 지지자 강경화의 임명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인사를 변호하는 진보진영 온건파들은 대체로 구 여권인 자유당과 조중동 등 우파가 이들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우파가 반대하므로, 반(反) 우파 진영은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영 논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첫째, 그들은 진보·좌파가 방어할 수 없는 것들을 방어하려고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말이다. 강경화의 딸 위장 전입은 평범한 노동자와 민중은 언감생심인 특혜와 특권 문제이다. 그래서 강경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촛불의 요구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입장도 분명치 않

다.

김상조의 경우,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야 아예 쟁점도 되지 못한다(좌파가 저작권소유권 논리를 우파와 공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나 김상조의 재벌 개혁론이 전혀 노동계급 친화적이지도 시장 규제적이지도 않은데도 진보·좌파가 그를 팬들 이유는 없다.(관련 기사 7면 참조)

우파가 무었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무엇이 자동으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노무현이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은 폄수라며 결사 반대했다. 그렇다고 진보·좌파가 대연정 제안에 찬성했어야 하나?

어떤 이는 2004년 초,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무현 탄핵 때를 기억해야 한다며 우파의 최근 문재인 인사 반대가 당시의 반동과 비슷한 것인 양 혼동을 드러낸다. 완전히 추상적인 비교일 뿐이다.

2003년 내내 노무현 정부는 여당의 석수가 1백 석도 안 돼 공식정치에서는 세력이 약한 정부였다. 그런데도 우파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대중의 개

혁 염원이 커지는 과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문제는 노무현이 취약한 입지를 극복하려고 우파에게 구애하다가 우파의 지지도 못 받고 지지층만 떨어져 나가게 한 것이었다. 우파는 당시의 민주당과 함께 이것을 기회 삼아 국회사수당 지위를 이용해 노무현을 국회에서 탄핵했다.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대중이 퇴진까지는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반동적 우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동적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그때 노무현 탄핵이 성공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앞당겨서 2004년부터 등장했을 것이다.

대중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즉각적으로 대중적인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탄핵 반대 여론(70~80퍼센트)은 당시 노무현 지지율의 갑절이었다.

지금의 정치 지형이 그런 상황인가? 문재인 정부는 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성공을 거둔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이 운동은 정치 지형을 (급격

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좌경화시켰고, 역대 최대 표차로 문재인이 대선 1위를 하는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후보(정의당 심상정)가 최초로 2백만 표 넘게 득표했다. 반면, 우파는 사분오열하고 절대 득표도 추락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높고 우파 정당들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문재인 인사 문제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력 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노무현 탄핵 경험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기억상실증이다. 좌파라면 여론조사나 온라인 댓글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친민주당계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는 반노동계급적·반민중적·친제국주의적 측면들을 보도해야 한다. 이낙연의 전두환 찬양 보도가 결코 민정당 사무총장의 발언 인용 보도만 있는 게 아닌데도, 그 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가짜 뉴스” 취급한 부정직함도 비판해야 한다.

특히, 좌파라면 친민주당계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개혁성”이라고 포장하

는 것이 노동계급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 자본주의의 효율과 착취율을 높이려는 개혁(부르주아적 개혁)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 좌파가 할 일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 때문에 결국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의식과 투쟁성을 강화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덧붙여, 그런 폭로와 비판이 반드시 우파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이 그 자리를 ‘진보 인사로 불리기에 합당한 인물로 대체하면 된다.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고 불충분한 개혁 행보에 있는 것이지, 좌파의 원칙적인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우리가 김상곤 비판은 자제하고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하지만 그의 정책과 행동이 개혁 염원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치고, 진보·좌파의 가치에 미흡하면 그때는 가치없이 폭로와 비판을 할 것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wspaper.org)에서 볼 수 있다.

영국 총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대 약진을 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김중환

6월 8일 치러진 조기 총선 결과는 영국 정치에 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졌다. 주류 평론가들은 물론 많은 좌파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석달 새 세 차례나 일어난 테러 때문이었다.

보수당 총리 테리사 메이는 당초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총선 조기 실시를 선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보다 무려 20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그래서 선거에서 보수당이 절반보다 50~1백 석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반면 노동당은 의석을 늘릴 가망이 없고 대표 제러미 코빈의 지도력은 완전히 파산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국풍’이라는 다니얼 튜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포함해야 한다.) 모두 헛소리였다.

선거 결과 보수당은 42퍼센트, 노동당은 40퍼센트를 득표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과반 의석도 지키지 못한 보수당에게는 제언이었다. 엄청난 지지율 격차를

거의 다 따라 잡은 코빈과 그를 지지하는 운동에게는 크나큰 성과다.

코빈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어떤 노동당 지도자보다도 더 많이 보수당 표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좌파적 주장으로 그랬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하다.

실제 정치 변화는 득표를 변화보다 더 크다. 선거 운동 기간에 두 차례나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테러 공격은 보수당에 유리한 사건이라는 통설을 깨고 노동당이 크게 선전했기 때문이다.

코빈은 테러 사건을 영국의 대외정책과 연결시켰다. 영국 정치에서는 아주 과감한 행동이었다. 주류 언론은 코빈에 분노하며 발광했지만, 광범한 대중은 코빈의 주장에 호응했다. 테러가 발생한 맨체스터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는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외쳤다. 런던의 여러 지역구에서도 코빈과 그의 측근이자 예비내각 내무장관인 다이언 애벗 등이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부” 코빈이 좌파적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움직였다.

‘코빈 현상’의 동력

코빈이 이처럼 성과를 거둔 가장 큰 요인은 그가 요즘 영국 노동계급 청년들의 정서에 맞게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로 선거에 입한 것이다.

먼저, 노동당의 이번 선거 공약은 지난 30여 년 새 가장 급진적이었다. 1980년 이래 민영화된 각종 사업을 재국유화하고, 공공지출을 크게 늘리고, 불안정 노동으로 악명 높은 ‘초단시간 노동’을 폐지하고(이 공약에 특히 청년들이 열광했다),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등.

더 중요한 것은 코빈이 이런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의 열정을 사로잡아 그들이 선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코빈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운집했다. 그 분위기는 아주 열광적이었고, 2년 전 코빈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 대표가 되던 때와 흡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코빈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이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활동가와 오랜 노동당 당원들도 많았다. 청년과 학생 등 지지자들의 역동성이 바로 코빈 승리의 핵심 동력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노동당의 기층 지지자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코빈이 당 대표가 된 이래 많은 청년들이 입당한 것이 가장 현저했다. 이처럼 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는 청년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많은 경우 노동당의 공식 선거운동 기구 바깥에서 그랬다.

코빈의 부상은 국제적 현상의 일부다. 미국 샌더스, 프랑스 멜랑송, 스페인 포데모스, (배신주의가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이 영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다만, 프랑스·스페인 등과 달리 영국에서는 좌파적 대안을 노동당 바깥에서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당 안에서 좌파적 개혁주의가 부상했다.

부차적이지만 보수당의 선거 운동이 형편없었다는 것도 코빈이 성과를 거둔 요인이었다. 보수당은 총리 메이와 “안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메이는 긴축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고 토론회도 한사코 거절할 정도로 오만한 인물이다. 더욱이 보수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의 자산을 압류까지 할 수 있다(‘치매세’)는 악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령 유권자들의 반발을 샀다.

자기만족은 이를 수도 있다. 당 내에서 코빈을 공격하던 노동당 우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그들의 일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것이 코빈 덕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선거 전에는 패배하면 코빈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떠들었으면서 말이다. 그들은 당분간은 잠잠할 테지만 언제든 다시 코빈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 본지 웹사이트에서 관련 온라인 기사 ‘보수당의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투표 때문이라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될 정치 불안과 좌파의 과제

보수당은 의석이 과반이 안 돼, 단독으로는 정부 구성이 불가능하다. 총리 메이는 북아일랜드의 영연방연합당(DUP)과 연정을 논의하고 있다. 성사되도 겨우 2석 많은 과반에 그친다. 영연방연합당은 개신교의 입장에서 지독하게 종파적이고(가톨릭 반대), 영국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과 연계가 있고, 낙태 반대와 동성애 반대 등으로 여성·성소수자를 공격하고, 기후변화 사실을 부인하는 우익 정당이다.(더 자세한 것은 5면 하단 기사를 보시오.) 보수당이 이런 자들과 연정을 꾸리려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몹시 불안정한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영국은 6월 19일부터 브렉시트 탈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상황을 자초해 당 안팎의 비난에 시달리는 총리 메이는 올해 안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 정치의 불안정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몹시 취약할 테지만, 선거 패배 직후부터 또다시 무슬림 혐오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며 교악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브렉시트를 되돌리겠다는 주장을 주되게 내세운 정당들(자민당과 녹색당)은 모두 별다른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의석을 많이 잃었다. SNP의 진보 행세가 더는 통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코

빈이 선거에서 성공을 크게 거둔 것은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우리 좌파를 고무하고 진보·좌파 측의 운동에 힘을 크게 실어 줄 것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대중적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투표 당일 총리 공관 주변에서 교원노조(NUT)의 한 지부가 급하게 집회를 개최했다. (그래도 1~2천 명이 참가했다.) 메이의 사퇴와 영연방 연합당의 연정 계획에 항의하는 집회였다.

영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다시 토론되고 있고, 이들 다수는 노동당 공식 기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노동당보다 왼쪽의 좌파에게 커다란 기회가 열린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 영국의 혁명적 좌파는 다양한 대중 항의 운동에 함께하고, 당 내 우파에 맞서 노동당 코빈을 방어하고, 동시에 명확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운동들에 다가가려 한다.



“난민을 환영한다”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 영연방연합당(DUP)은 무엇인가

차승일

보수당이 연정 파트너로 삼으려 하는 영연방연합당은 1971년 이언 페이즐리가 창립한 매우 우파적인 친영국 정당이다. 북아일랜드를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했다.

영연방연합당은 오랫동안 백색테러(우익적 동기로 암살·파괴 등을 수단으로 함)를 추구해 왔다. 백색테러 단체 ‘얼스터 리지스텐스’는 페이즐리 등 영연방 연합당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986년 창립했다. ‘얼스터 리지스텐스’는 다른 폭력 단체들과 함께 은행을 털어 무기를 구입했다.

영연방연합당의 지도적 당원이자 북아일랜드 정부의 제1장관(총리급)을 지낸 피터 로빈슨도 ‘얼스터 리지스텐스’의 열성 당원이었다.

페이즐리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연방’을 수호한다며 암살단을 조직했으며, 1981년에는 제3군(Third Force)를 창립했다. 제3군 회원들은 단적으로 총포소지 면허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기를 들 수 있다는 의사가 표시였다.

보수당 우파였던 이복 파울이 “이민자들은 영국의 짐”이라는 등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언사로 출당돼 북아일랜드로 이주한 적이 있다. 그땄 파울을 보좌했던 인물로 제프리 도널드슨이라는 자가 있었다. 도널드슨은 영연방연합당 소속의 최장수 국회의원이다.

올해 1월 영연방연합당 대표 알린 포스터가 제1장관을 맡았던 북아일랜드 정부가 무너졌다. 포스터도 연루된 녹색에너지 장려 정책 스캔들이 촉발한 일이었다. 이 스캔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도록 정책을 고안해서 약 4억 파운드(약 6천억 원)를 날려먹은 사건이다.

그밖에도 영연방연합당의 추악한 모습은 많다. 영연방연합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부정한다. 낙태권도 부정한다. 심지어 강간 등 연해 온 자신의 정책을 펼쳐 나가려 할 것이다. 공공무일자리 12만 개



강도도 열광도 없는 마크롱의 승리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

마크롱 신당이 승리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차승일

6월 11일 프랑스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1차 투표 결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낮은 투표율이다. 48.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이다. 2012년 총선 때의 57퍼센트보다도 훨씬 낮다. 그만큼 마크롱의 정치적 지향에 프랑스인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신호다.

둘째, 전통적 중도계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 총선에서 27퍼센트를 득표한 중도우파 공화당(당시 당명은 대중운동연합)은 이번에는 15.7퍼센트를 득표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은 몰락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29퍼센트를 득표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던 사회당이 이번에는 7.4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해 5위로 주저앉았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페단. 장기 경제 침체, 긴축재정,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낳은 정치 위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철저한 좌파’ 정책

멜랑송은 이번 총선이 프랑스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셋째, 장클레 멜랑송의 정당 ‘불굴의 프랑스’가 11퍼센트를 득표해 크게 성장했다. 2012년 멜랑송의 좌파전선은 6.9퍼센트를 득표했는데, 이번에 거의 갑절로 득표한 것이다. 득표수로 약 70만 표가 증가했다. 기존 정치세력 중 유일하게 득표를 늘렸다. 투표율이 낮아도 득표가 오히려 늘었으니 더욱 값진 성과다. 멜랑송의 성장은 정치 양극화의 왼쪽 측면으로서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좌파적 개혁주의가 성장하는 현상의

일부이다.

영국 총선 결과와 함께 멜랑송의 성장은 유럽이 ‘우경화’했다는 일각의 관측이 일면적임을 보여 준다.

넷째, 그럼에도 프랑스의 나치정당인 국민전선의 득표가 ‘불굴의 프랑스’보다 높다. 국민전선은 13.2퍼센트를 득표해 3위를 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13.6퍼센트를 득표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득표

수도 약 50만 표가 줄었다.

그래도 국민전선이 약 3백만 표나 얻었으므로 반자본주의신당 NPA 등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반나치 공동전선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퐁블리크 앙마르슈)이 언론들의 예측대로 전체 5백77석 중 4백 석 이상을 차지해 대승을 거두더라도, 그 정부에 예상만큼 큰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전진하는 공화국당’은 28.2퍼

센트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2012년 총선 때 사회당의 득표율 29.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전진하는 공화국당’은 전체 유권자의 단지 15퍼센트의 지지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마크롱의 신당이 70퍼센트 가량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프랑스 선거 제도의 특성’과 투표의 분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래도 마크롱은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한 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공언해 온 자신의 정책을 펼쳐 나가려 할 것이다. 공공무일자리 12만 개

를 줄이고, 6백억 유로(약 75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친기업·반(反)노동자 정책, ‘이슬람주의 테러’를 막는다며 경찰 1만 명을 늘리는 인종차별 정책,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제국주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마크롱은 1년 반 동안 유지된 국가비상사태를 올해 11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집회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크롱의 계획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위기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부르기 쉽기 때문이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프랑스 노동자들은 전일 사회당 정부 하에서도 저항을 했다. 게다가 마크롱 정부는 사회당 정부와 달리 노조 상관간부층에게 ‘우리의 정부’라고 인식되는 정치적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알고 보기

프랑스 선거 제도의 특성

프랑스 총선은 두 번의 투표를 실시한다. 1차 투표 때 투표율이 25퍼센트 미만이거나 50퍼센트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을 실시한다. 결선에는 1차 투표 때 12.5퍼센트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이 진출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 때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29퍼센트를 득표했지만 최종 2백80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대중운동연합(공화당은 1차 투표에서 27퍼센트를 득표해 사회당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차지한 의석은 1백94석이었다.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김중환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카타르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한편 6월 7일 이란에서 호메이니 묘지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자, 이란은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처하는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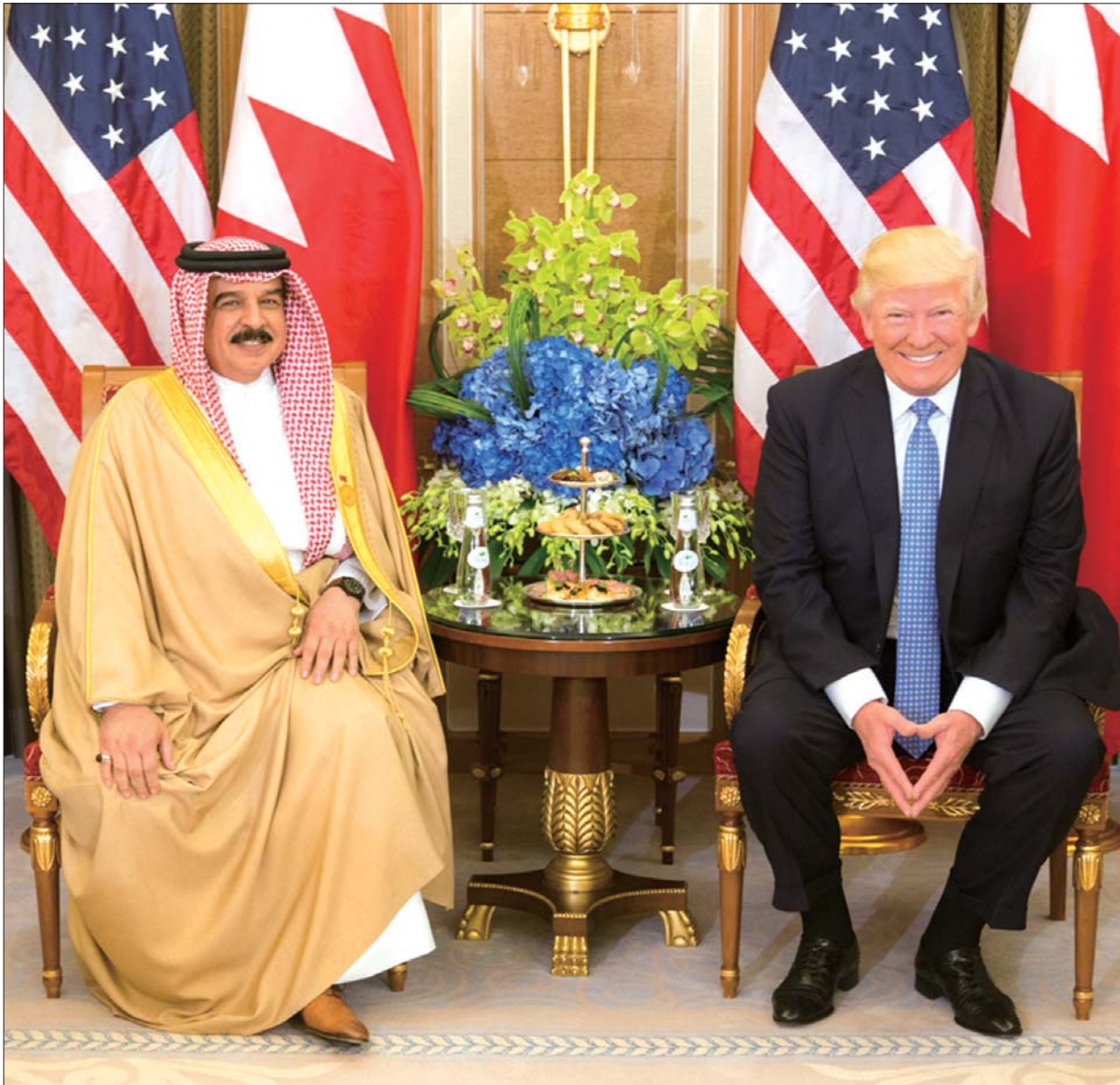
주류 언론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1천 4백 년 전에 후계자 문제를 놓고 이슬람이 수니파(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이란)로 분열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설명에는 중동 사람들이 종교에 사로잡혀 허구한 날 갈등을 일삼는다는 인종 차별 관념이 깔려 있다. 이런 설명은 중동이 평화로워지려면 미국 등 서방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따금 동반한다.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서로 반목하는 진정한 원인은 바로 제국주의 체제에 있다.(그리고 미국은 그 정점에 있다.)

지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서로 중동의 맹주가 되겠다는 정치적 이유로 다투는 것이다. 그런 야심은 또한 지배자들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국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하다는 체제의 동역학에서 비롯한다.

19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이란의 왕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상대국을 방문하고 만나서는 서로 치켜세워 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러는 것이 미국 주도의 당시 국제 질서에 영합하고 아랍 민족주의라는 당시 공동의 적에 대처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파흘라비(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미국에 반기를 드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하자 둘의 우호적인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친미적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라크 전쟁(1980~88년)에서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나빠졌다. 오늘날 갈등의 뿌리는 1천4백 년은커녕 40년도 채 안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걸프 왕정 지도자들의 아류 제국주의 야욕을 부추겼다

이라크 침공부터 오바마 하의 난장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는 최근 상황은 중동이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난 몇 년간 두 국가 사이의 긴장은 크게 고조된 것도 제국주의 체제 질서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2003년 미국은 유럽·일본·중국 등 다른 강대국들에게 자신의 세계 지배력을 각인시키려고 이라크를 침공·점령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완전히 실패했다. 현재의 강력한 점령 반대 운동과 세계적 반전 운동 덕분이다. 미국은 9년 동안 이라크에 막대한 돈과 군대를 투입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지지자들을 배신하며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을 거들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 저항 운동을 종파별로 분열시키려고 인접한 이란의 영향력에 기댔다. 미국은 아래로부터 저항으로 쫓겨나기보다는 차라리 이란에 손을 빌려서라도 사태를 안정시키기를 원했다. 이란 지배자들은 이라크인들의 해방보다는 자신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에 응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주요 하위 파트너로서 이란을 적대시하며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워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크게 반발했다. 특히 두 국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아랍 혁명이 터졌고, 중동 지배자들 모두를 떨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해 연안국 왕정들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미국이 속절없이 지켜만 본 것에 특히 경악했다.

하위 파트너들

이란 역시 주요 동맹국인 시리아 정권이 혁명으로 전복되고, 수년간 공들인 이라크 정부가 다시금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이란은 아랍 혁명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중동 도처에서 반혁명을 지원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사이에 위치한 시리아에서 이란은 학살을 자행한 아사드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 중 지독한 종파주의자들을 지원하며 시리아 혁명을 종파적 대리전으로 비틀었다. 최근 아이시스가 이란을 겨냥해 테러를 벌인 것도 시리아 정권의 학살에 분노하는 아랍인들의 공분을 종파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인 듯하다.

오바마 시절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무게를 두려 하며 중동에는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등이 곳곳에서 살인적 경쟁을 벌이되 어느 한 쪽도 완전히 승리하지는 않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하위 파트너들은 이런 미국에 불만이 커졌다.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 지위의 상대적 하락, 이라크 점령 실패로 인한 패권의 위기, 폭발한 중동의 정치 위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들은 더는 미국이 지켜 주리라 기대하기 힘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도처에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썩을 자르겠다는 미(미국에게는 부차적인) 예멘 폭격에 열을 낸다.

반면 오바마가 아이시스에 맞서겠다고 만든 국제연합군에는 60여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는 미미하다.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중동 문제에 관한 한 자국 내 소수민족(쿠르드족)의 저항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며 필요하면 러시아와도 가까워질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 내 일부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가 중동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하위 파트너들을 다시금 추스려 그들이 미국을 대신해서 더 많은 구실을 하도록 하려는 듯 보인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1백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을 약속했다. 국무장관 틸러슨은

“이란의 해로운 영향력” 운운하며 그동안 오바마에 실망했던 걸프해 연안국 왕정 지배자들을 기쁘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장관과 서열 3위인 제2왕세자는 트럼프를 가리켜 “무슬림의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세워, 트럼프 때문에 고통받는 평범한 무슬림들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에 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에 고무돼 그간 이란과 아랍 혁명에 대처하는 방식이 자신들과 달랐던 카타르에 규율을 부과하려고 ‘단교’라는 카드를 꺼내 든 듯하다.〈한겨레〉등은 카타르를 개혁 군주국인 양 묘사하지만 카타르는 ‘국제 노예노동지수’가 세계 5위이고, 극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이 1천 명 넘게 사망할 정도로 끔찍한 나라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네오콘 등이 이란에 주요하게 투자하는 유럽과 한국 기업(포스코, SK텔레콤, 산업은행) 20여 곳을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6월 초 폭로되기도 했다(〈더인더셉트〉). 지난해 오바마가 이란 경제 제재를 풀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엇박자

그러나 오바마를 괴롭힌 문제에 트럼프도 곧 직면할 것이다. 즉, 미국 단독으로는 중동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하위 파트너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도록 조율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문제

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란을 배척할수록 이라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도 난제다.

미국 경제 부흥책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지배계급의 상당수는 트럼프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발표했을 때 트럼프는 즉각 환영했지만 국방부는 ‘카타르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엇박자 논평을 반복적으로 냈다. 미국과 함께 이란 핵협상에 참가했던 독일 외무장관도 “카타르와의 대외관계를 그렇게 ‘트럼프화’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와 미국의 중동 전략이 최종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중동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 체제가 온존하는 한, 미국의 직접 개입 약화만으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주요국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 탈출을 위해 중동에서 군사적 도박을 새로이 벌이려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중동과 세계 도처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열강이나 지역 맹주 자리를 노리는 지배자들 사이의 협상, 또는 그중 특정 세력을 편들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경쟁을 낳는 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항의 가장 큰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있다

김상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재벌을 지지하는 셈인가?

강동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 야당들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인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체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들고 늘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의 인준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의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조속히 인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이 “부패”를 문제 삼으며 김상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부패 하면 따를 자가 없는 자들이 말이다. 그리고 우파들이 재벌을 보호하려고 김상조 후보를 반대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상조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누가 봐도 재벌을 위한 김상조 반대”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상조를 지키면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걸까? 재벌을 과연 개혁할 수 있다면 노동자 계급의 처지는 나아질 수 있는 걸까?

김상조 후보자의 재벌 개혁론은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관점에서 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 그런 접근법은 자산 소유자들 사이의 공정·공평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문제 의식의 발로로, 김상조 식 재벌 개혁이 설사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노동자 계급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

무엇보다, 재벌의 경영이 투명해진다고 해서 재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감축하면서 정규직 고용을 늘리거나,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력 집중을 막으며 재벌이 맡아 온 사업 부문을 중소기업에 넘긴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좌파의 상당수는 김상조 식 재벌 개혁론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할 뿐이라고 비판해 왔다.

재벌 개혁의 공상성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의 재벌 개혁안 자체가 계속 후퇴해 왔다. 최근에는 “지금 삼성의 3세 체제를 아예 부정할 순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재벌의 3세 승계를 용인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도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김 후보자의 재벌 개혁 의지를 신뢰하기 힘들다”며 “청문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후보자의 이런 후퇴에는 2008~09년에 시작된 경기 침체(“대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김상조 후보자는 심지어 최근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이런 말까지 했다. “재벌이 성장은커녕 생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 재벌들에게 임금을 올리고(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론),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정책(대기업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론)도 유효하지 않다.”(《한겨레》 2016년 1월 18일치.)

김상조 후보자는 전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단축이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질서를 중시하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재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협력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확대나 실질임금 삭감 등으로 고통받는 동안 재벌들은 막대한 이윤을 쌓으며 성장해 왔다. 재벌의 이윤을 공격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김상조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자본가들 간의 ‘정의’일 뿐이다.(실행 가능성은 별문제로 하면 말이다.)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인물을 구하는 데 나서기보다 재벌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좌파가 추구해야 할 본령이다.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20(목) - 23(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 나흘간의 토론의 장
-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제들

여성 차별과 해방을 위한 투쟁

- ★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 차별
- ★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 ★ 여성과 《자본론》
- ★ 러시아혁명과 여성해방
- ★ 패널 토론 한국 여성운동의 현재와 미래
-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본 한국 페미니즘의 정치
- ★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 ★ 낙태, 낙태죄 그리고 여성의 몸

노동운동

- ★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 ★ 1997년 IMF 이후 20년: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의 변화
-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어떻게 가능한가?
— 기아차 노조 분리와 교섭을 돌아보며
- ★ 노동운동은 재벌개혁을 요구해야 하는가?
- ★ 노동자 경영 참가, 과연 노동자에게 이로운가?
- ★ 민주당 정부와 사회적 합의주의
- ★ 한국 노동조합 운동과 개혁주의
- ★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 ★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제국주의

- ★ 트럼프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아시아·한반도
- ★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위기] 김일성에서 김정일까지
- ★ 국가자본주의 이론
— 옛 소련, 북한, 중국 사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
- ★ 제국주의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

- ★ 9년 만의 정권 교체 —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제공할 것인가?
- ★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당의 행적
- ★ 패널 토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좌파

※ 이밖에도 한국사, 러시아혁명 100주년, 마르크스주의 방법,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 60여 워크숍이 개설됩니다.
※ 웹사이트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세요.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참가비 하루 25,000원 / 나흘 70,000원

대학생·청년실업자 할인가 하루 15,000원 / 나흘 40,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할인가 하루 8,000원 / 나흘 22,000원

※ 노동조합·소모임·학생회 등 한 단체에서 나흘 티켓을 10명 이상 구입시 단체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기존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workerssolidarity.org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장호중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은 인사 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하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악명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 하면서 까다로운 국회 통과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 각종 우회적 조치를 활용했다. 그런데 그 조치들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혀 그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박근혜는 애초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자, 포괄적 규제 완화 법안인 서비스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서비스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의 주도로 각종 민영화를 자유 자재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법도 저항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확실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법에 담고 있던 포괄적 규제 완화 조치를 수십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체적 규제 완화 조치들을 명시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개발’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을 회유하려는 꼼수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법안들에 동의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국경제〉 6월 11일치). 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로 들릴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법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야당 시절에도 내세운 논리로,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



2016년 5월 16일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

당시 의료 민영화 저지 운동 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서비스법이 대단히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어서, 단순히 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는 의료 민영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관련 규정은 관광업 분야인지 보건의료 분야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미 허용된 병원의 영리 자회사들도 사업 내용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게다가 서비스법은 일반법의 상

위법인 ‘기본법’이다 보니 나중에 기존 의료법 등을 개악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의료 민영화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서비스법은 철도 등 다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서비스법의 ‘지역화 버전’으로 불린다.

네거티브 식 규제 완화

이처럼 문재인과 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와 단절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 주는 조짐은 야당 시절부터 계속 발견됐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비스법 통과를 약속했고 안희정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선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발표한 주요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 평가에서 문재인은 심상정(87.5점)에 크게 뒤처진 52.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대선 2주 전까지도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더니, 결국 발표한 공약은 2012년 공약보다도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의 자본에 보건의료 ‘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제시하려 했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줄줄이 밀어붙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비슷한 정책에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등 각종 산업 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료와 직결된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내맡기면 다른 공공의료 정책도 쉽게 무력화된다.

예컨대 박근혜는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며 병원의 임상시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안전을 저버리는 짓이다. 이 규제 완화 결과로 요즘 지하철에는 각종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경제 위기 하에서 고통받는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몸이라도 팔아 연명하라고 유인하는 꼴이다.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도 박근혜가 추진한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개발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인 듯하다.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진영은 새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경계하며 지금부터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티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010-6491-2792 / ws@wspaper.org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